

탁아정책의 속셈 파악 '발등에 떨어진 불'

보사부 9월18일 경과조치,

민간탁아운동가와 정부

최근 아동복지법 시행령 마감기한이 9월 18일로 다가옴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는 민간탁아소 신고문제와 일반 사회단체에서 배출된 탁아모의 자격문제 등에 대해 정책실무자와 탁아소운영자가 함께 토론했다.
- 편집자주 -

사 회 : 탁아문제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탁아입법을 앞두고 각계에서 무성하게 열리는 각종 토론회가 바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이같은 열기 가운데서 최근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경과조치 마감기한인 9월18일을 앞두고 민간 지역탁아소들이 시설 기준을 못 지켜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간탁아소운영자와 보사부 정책 담당자가 만나 9월18일 조치의 문제를 비롯한 탁아 정책의 쟁점들을 짚어 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평소에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되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4월부터 탁아정책 본격화

김경태 : 먼저 보사부에서 탁아대상 아동을 82만명으로 발표했는데 도대체 이 수치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옥주 : 보사부 탁아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0세~5세의 아동은 약4백11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여성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중 1백52만명이 취업모 아동이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수치는 약 82만 정도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요구에 신속히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자체조사가 없었지만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과학연구소>에 탁아사업 기초 자원조사를 의뢰했고 이제 마무리단계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재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김경태 : 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 탁아문제가 해결되면 취업하려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장 급한 수요충족과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잠재적인 수요에 대응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옥주 : 탁아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90년 4월부터죠. 정부에서도 탁아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급한 수요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급한 수요에



김경태

대응하고 점차 수혜 대상을 넓혀 잠재수요의 요구를 해결해야겠죠.

지역탁아소 해체될 위기라는데

사 회 : 9월18일 경과조치 시행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지역탁아소가 해체될 위기라는 우려가 많고 지역탁아소연합회는 질의서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옥주 : 민간탁아소는 전국에 약 8백50개 정도(가정탁아포함)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 민간탁아소들 중 신고되지 않은 탁아소가 상당히 많죠. 정부가 9·18경과조치를 시행한 것은 이런 음성적인 탁아소를 모두 양성화하고 합법화시키기 위해 현황파악을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기준은 최대한 지켜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우선 신고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치 보사부가 지역탁아소를 폐쇄 혹은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진 듯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런 오해입니다.

김경태 : 9·18조치를 정부의 탄압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실제로 관할 기관의 경고성 공문과 협박 등의 폭력적 대응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탁아소의 경우 9월18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1년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된 공문을 받았고 또 어떤 탁아소는 관할구청으로부터 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데 번기가 하나뿐이라 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대문

때 : 1990년 8월25일
곳 : 여성신문사 회의실
참석자 : 김경태/지역탁아소연합회 회장
장옥주/보사부 아동복지과 계장

사 회 : 김효선 기자
정 리 : 홍미영 기자
사 진 : 이정재 기자

의 한 탁아소도 30명을 보육하고 있는데 10명을 내보내고 신고하라고 하는 등의 경우죠. 이번 조치가 실패 파악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경고성 발언과 공문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기준들이 관할 기관마다 일정치 않은 것도 혼란스럽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수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옥주 : 정부입장에서는 현재 보사부의 시설기준에 맞는 탁아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조건에서 모두 양성화하자는 의도였는데 보사부에서 시·도, 시·군으로 하달되는 과정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 제기하시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탁아대상을 가정탁아 20명 이하 시설탁아 30명 이상으로 한 이유도 지금 있는 아이들을 거리로 내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원이 초과해 있는 상태지만 보육하던 아동이 나가면 더 받지는 말라 달라는 뜻이죠.

김경태 : 현실적으로 탁아소는 포화 상태인데다 아이들은 항상



장옥주

탁아수혜 대상 확대돼야

사 회 : 탁아지원대상의 문제를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태 : 네, 조금 전 제가 말했듯이 수혜 대상인 생보자와 의료부조자의 탁아시설 이용은 극히 적어요. 실제 탁아 수혜대상이 현실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월수입 50만원 정도 되는 가난한 맞벌이 가정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옥주 : 정부가 정한 생보자나 의료부조 아동 중 탁아시설이 필요한 인원은 약 8만7천명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설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지정된 것이죠. 따라서 정부운영탁아소의 70%는 영세아동이나 의료부조아를 보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가 추천한 자로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김경태 회장이 말씀하신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어요.

김경태 : 시장이나 군수의 추천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관할기관마다 추천 기준도 다르고 임의성이나 부조리가 개입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라도 추천장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사부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옥주 : 저희가 세세한 규정까지 강제하지 않은 이유는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는 분위기속에서

중앙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면 경직되고 획일적인 행정이 될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사 회 : 탁아지원 수혜대상이 협소하다면 지역에서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경태 : 예를 들자면 전·월세 얼마 이하인 자, 월수입 50만원 미만인 자 등이 더 현실적인 대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정조사전문요원을 확보해 정확한 현실파악을 하고 직종별, 소득별, 부채유무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되어야 할 것라고 봅니다.

장옥주 : 지역에 따라 전월세, 질병유무, 월수입 30만원 혹은 4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지엽적인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그것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죠.

또 정확한 사전조사로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가정조사전문요원을 확보하고 계속 늘려가려고 합니다.

정부보조는 차등지원제가 합리적

사 회 : 보사부의 탁아예산은 어느 정도인지요?

장옥주 : 정부에서도 탁아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면에서 보면 탁아정책을 본격화한 90년 4월 이미 백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부서의 내년예산은 작년대비 6~7% 증가가 고작인데 탁아예산은 전년대비 1백1퍼센트 증가했어요. 90년에 국고가 1백91억이었는데 91년에는 국고2백72억과 지방비를 합쳐 모두 4백억원의 예산을 갖게 되는 셈이지요. 국회에서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이보다 적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사 회 : 그 정부예산으로 혜택받는 탁아소의 현황을 좀 밝혀 주십시오.

장옥주 : 탁아지원대상 82만명중 약9만명은 공장이나 직장·지역탁아소에서 해결가능하고 64만3천명은 자기부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인 8만7천명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들에 대한 탁아시설을 92년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총9백40개의 탁아소가 필요한데 이중 새마을유아원이 탁아소로 변형된 경우가 5백40여 곳, 신축 탁아소를 3백개로 잡고 있어요.

현황파악인가 탄압인가

정책 실무자의 토론

김경태 : 서울시에서 탁아소 지원 대상을 새마을 유아원과 종교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부모의 수입이 비슷할 경우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개인별 부담금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탁아비용이 싸지만 가정탁아를 하는 경우 월10만원 이상이 탁아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점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탁아소 지원방안은 없습니까?

장옥주 : 탁아소 지원예산은 국고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가 자기예산을 가지고 벌이는 사업은 알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 문제는 서울시와 직접 대화를 해야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는 융자나 세금감면 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이며 국민주택건설시 탁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민간탁아소에도 지원하려면 재무부 등과도 논의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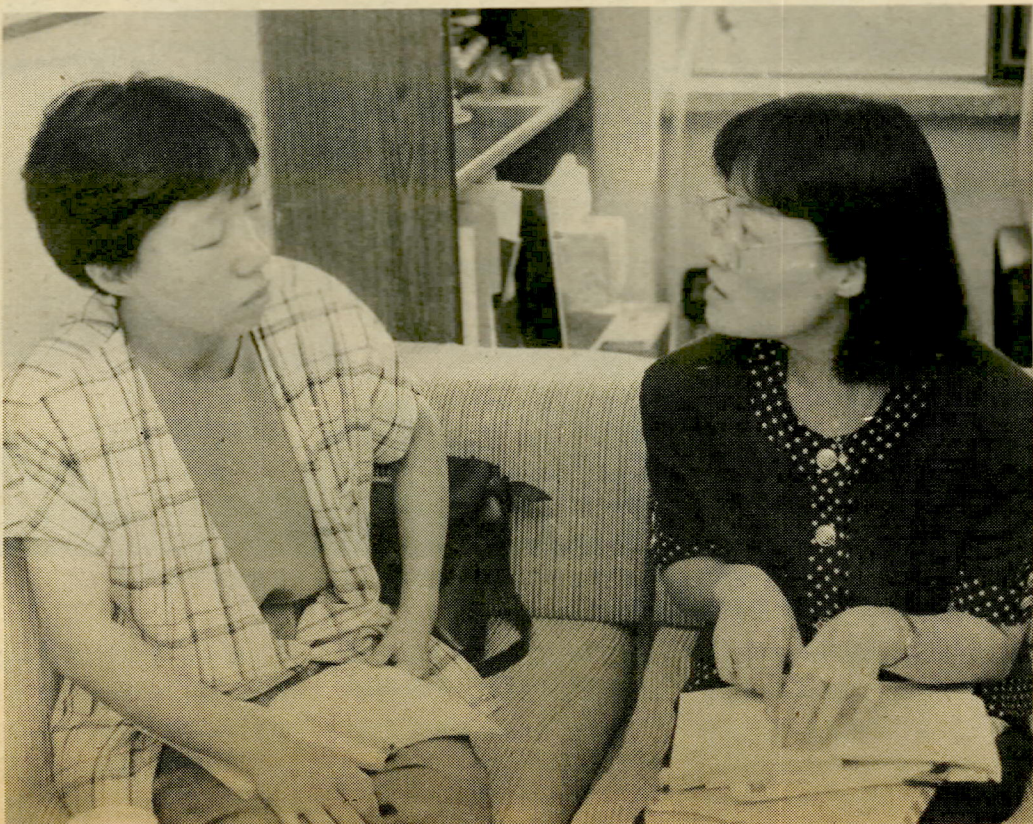
김경태 : 보사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는데요. 일본의 '차등지원제'처럼 수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어려운 형편에서 탁아비용이 불공평하게 부과되는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옥주 : 매우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도 탁아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운영형태를 연구해 왔는데 일본식의 차등지원제가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제도는 0이 아니면 백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혜택이 아니고 수입정도를 0에서 백까지 나누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제도예요. 일본은 부모소득을 16등급으로 나누고 자기수준에 맞는 보육료를 탁아소가 아닌 사회복지사무소에 갓다내면 그곳에서 각종 지원금을 합해 탁아소에 줍니다. 아이들이나 교사들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알지 못해 공평하게 보육하게 되요.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수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전문요원을 약 4천명 정도 확보해 소득수준을 정확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탁아사업지원금도 이 기준에 따라 하게 되겠지요.



김경태 : 그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아교사 자격고시의 문제점

사 회 : 탁아교사 자격고시를 1회에 한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구제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네요.

장옥주 : 보사부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종사자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종사자 기준에 의하면 교사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보육사는 아동복지관련 14개학과와 전문대졸이상 학력소지자입니다. 그외에 고졸이상학력으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으면 보육사 3급자격증을 줍니다.

탁아모교육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되다 보니 정부의 일정기준에 맞는 자격심사가 필요하게 된 거죠. 정부도 몇개월씩 유료로 교육받은 탁아모를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1회에 한정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보사부는 사회복지연수원에서 탁아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민간 교육기관을 몇군데 지정할 예정입니다.

사 회 : 자격고시를 1회에 한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생겨날텐데요.

장옥주 : 상시적인 자격시험으로 할 경우 교육기관이 학원화되어 유치경쟁을 벌이는 등 또 부조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1회로 한정한 것입니다.

김경태 : 또 한가지 문제는 교사의 경력인정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똑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경우에 한명은 시설탁아소에서 다른 한명은 민간탁아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민간탁아소에서 일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불공정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옥주 : 경력문제는 정부예산과 밀접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10년 20년 경력을 모두 인정해줄 때 정부예산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 때문에 경력인정에는 제한점이 있죠.

하지만 민간탁아와 시설탁아에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가정탁

아라 할지라도 신고만 되어있으면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야

사 회 : 지금까지의 토론을 정리 해보면 정부가 1차지원대상으로 계획한 탁아대상 아동은 모두 8만7천명이며 점차적으로 탁아시설을 확충해 수혜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기본입장을 전제로 9월18일 경과 조치에 최대한 신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9월 18일 조치에 대해 시행기관의 오류는 민원체기로 시정할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김경태 : 토론과정에서도 느끼듯이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과 당사자간의 오해는 충분한 대화로 정부는 현장의 구체적 실정을 상세히 알고 또 정책결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탁연>이 법적근거는 없는 단체이지만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이 시의 일방적 정책만 고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없이 정책시행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운영, 시행기관마다 일관된 지침이 없는 등의 혼란으로 서로간의 불신이 생긴다고 봅니다.

확고한 원칙으로 일관되고 합리적 정책이 실현되기 바랍니다.

장옥주 : 제가 탁아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탁아사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깊어졌지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 내놓은 정책이 언론에서나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이번 9·18경과조치에 대해서도 언론의 적지 않은 왜곡보도로 무척 당황스럽더군요.

제 생각으로 문제제기는 발전의 계기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정책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에요.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시행해서 잘못되면 언제든 고쳐 갈 수 있지요.

사 회 : 아직 가야 할 길이 훨씬 먼 탁아사업을 좀더 잘해 보자는 생각에서 이런 오해도 생긴것 같습니다.

보사부와 탁아담당실무자들간에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탁아사업을 더 힘있게 추진해야 하겠니다.